MVPR-2007-18

VIP REPORT

2007. 10. 15.

■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이명박 후보 초청 토론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 행 인 : 김 주 현
편 집 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홍순직, 박덕배, 주원, 이부형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02-3669-40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이명박 후보 초청 토론

Executive Summary ····· 1

1. 리더쉽과 경제성장 ····· 2

2. 교육정책 개혁 ····· 7

3. 정부 기능 조정 ····· 8

< 토론 > ····· 11

■ HRI 경제 지표 ····· 28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이명박 후보 초청 토론

□ 리더쉽과 경제성장

- **리더쉽 :** 현재 한국은 지도자들이 세계화에 부합하는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해서 4% 대의 저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을 맞고 있음. 21세기 세계화에 걸맞는 방향으로 창의적인 리더쉽을 발휘해야 함

- **경제성장 :** 제대로 된 리더쉽을 발휘하면 7% 대의 경제성장도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부 기능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 개혁

- **입시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현재 학생들은 입시부담에 짓눌려 있고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 입시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자율화를 추진해야 함

- **공교육 정상화 :**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교육 수준이 향상되므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공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교육 자율화** :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교육 자율화를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대학입시에 대해 대학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며,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교육부의 통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함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 : 교육자율화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더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여와 대폭적인 장학금 지급을 추진해야 함

□ 정부 기능 조정

- **정부 기능 조정 추진 :**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작은 정부를 실현한 경우가 없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집권하면 정부 기능 조정을 추진할 것임. 이를 위해 최소한의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하고 그 외의 기능은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해야 함

- **정부와 공직자의 자세 전환 :** 정부 기능 조정과 함께 능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국민을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의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작은 정부 이전에 공직자의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이명박 후보 초청 토론

□ 출처 : 한경밀레니엄포럼
□ 일시 : 2007년 10월 8일
□ 연사 :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1. 리더쉽과 경제성장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90% 정도는 대부분 제가 평소에 익히 아는 분들이고 10% 정도도 다 안면은 있는 분들이라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한경 포럼에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아직도 마인드는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오래 있었지만, 정치를 한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가 여의도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을 했지만 당직을 한 번도 맡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 생활이 낯선 입장입니다. 이번에 후보가 되니까 당사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리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오래 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의도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의도에서 근무하게 되면 여의도식 정치에 묻힐 것 같은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어떤 때는 있어 보면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에서 정치를 맴돌다가 저녁에 나와 보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업할 때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정치를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 다음날 나가면 또 똑 같은 이야기가 맴돕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여의도를 나와서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이기 때문에 제 자신 역시 요즘 열심히 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 정치사에 없는 그러한 경선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여당이 요즘 경선하는 것과 비교하여 한나라당이 대단한 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도 당이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한국 정치사에서는 정권을 뺏기면 당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두 번이나 정권을 찾아오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라는 이름하에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위태위태하게 생각하셨지만 한나라당은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경선을 마감했습니다. 패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 또 지금도 아주 단합된 한나라당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범여권을 보면서 대통령후보 경선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한나라당은 정권을 찾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권을 찾아와서 오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찾아오는 데에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 막상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임기 중에 로드맵을 만들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나라당은 로드맵을 미리 잘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을 되돌아보면 지난 30년간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쭉 발전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10년 간은 어쩌면 지난 30년간의 탄력에 의해서 그저 10년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비판은 아닙니다. 어쩌면 경제인으로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난 10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대학을 방문하고 각계 각층을 방문해 보면 어느 계층도 만족하는 계층은 없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대학에 가서 모처럼 대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석에 집을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가는 이유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공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제가 만났던 대학생 중에 상당한 숫자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때도 물론 경험했지만 서울시 공무원 700명 뽑는데 서울에 올라오는 모든 열차표가 만원이 되어서 표를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숙소가 모자라서 숙소를 구할 수 없었다는 진풍경이 오늘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전력을 쏟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도전적 정신이 없이 편안한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도 힘들지만 얻은 일자리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자리를 선호합니다. 앞으로는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또 정년이 끝나면 연금도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풍토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과연 21세기에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풍토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가 지난 세월에 평균 4% 미만의 저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고, 많은 젊은이에게 일자리 없는 것이 당면한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따져보면 저는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이든 대학이든 리더가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건하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총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업의 장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최근에 다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발전 여부에서 확실히 차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21세기에 맞는 창조적 도전을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계화된 시대에 너무 국내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몰두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도자에서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내 문제에 얽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세계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 세계화는 부국과 빈국 간에 더 잘 살게 하고 더 못살게 하여 반세계화 운동이 나타나는 점도 이해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우를 보면 세계화를 잘 활용하는 것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인적 자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잘 교육시켜서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화 될수록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화에 의해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는 불리한 것이 있지만 저는 그것 자체도 우리는 경쟁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선이 세계 3대 강국이 될 수 있고 1, 2, 3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핸드폰을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세계화 덕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화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경제성장이 저성장에서 보다 고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적 수요가 너무 갑작스럽게 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예산은 국방비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는 교육부 예산이 국방부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복지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아마 교육 예산이 3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비가 22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서도 무려 61조입니다. 그러나 국방비와 교육비를 합쳐도 복지비 예산보다 더 적습니다. 요즘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을 하면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분배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민의 1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84%는 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작년에 발의를 해서 정부 예산으로 기초 연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예산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예산을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관점에서 누를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다 라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경제 성장을 더 쉽게 해서 재정 수입을 더 만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계획대로 못하게 되어서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 아시지만 금년 들어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이미 300조 가까운 부채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조세 면에서 보면 세금을 상당히 높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목표를 경제 7% 성장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과연 경제성장률을 7%로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저성장에 저고용이 선진국형으로 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 7%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우리 현실을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보는 그 견해는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재 경제 환경을 개선한다면 6, 7%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가 3, 4%나마 성장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한 점도 있지만 세계 경제가 좋은 것에 편승한 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교육정책 개혁

저는 우리가 7% 성장하려면 어떤 점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으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육 현실은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고 어린 아이들은 대학 입시라는 고통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에 이르기 때문에 입시에 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수능시험에 시달리고 내신 성적 때문에 학부모까지 전부 신경을 쓰고 또 본고사 시험을 위한 과외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차기 정권 5년을 똑같은 교육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입시와 관련한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고, 결국 그것은 대학에게 입시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30년 동안에 교육부가 이 입시 제도 하나를 잡고 30년을 매달렸지만 오늘까지도 해결을 못 했습니다. 만약 30년 전부터 자율에 맡겨버렸으면 불과 몇 년 간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쯤 대학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지방 대학들을 보면 지방 대학들이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원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수용 능력보다 입시하는 학생들이 더 적게 되면 결국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어느 대학에 가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출신은 남아돌고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부족하고 이런 모순된 현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생들은 과연 지적 수준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교육 수준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의 교육 수준은 국제 평균으로 비교면 굉장히 떨어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한 대학을 지적하기 힘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현재 교육 제도로써는 우리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육 정책에서 말씀드린 대학 입시의 자율이라든가 공교육을 정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통계가 차이가 있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몇 통계에 의하면 약 30조 가까운 사교육비가 든다고 발표한 곳이 있고 그 사교육비 가운데 반 정도는 영어 과외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교육비 국가 예산이 32조인데 사교육비가 30조가 넘는 이런 모순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교육비의 15조를 공교육에 투입하더라도 학부모는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를 없애겠다는 공약은 헛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을 잘 쓰면 현재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교육의 예산에 조금 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평준화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수월성과 다양성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도 저는 자립형 사립고 만드는 것을 4년간 교육부와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날 때 겨우 세 곳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부와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의 싸우다 시피해서 달성했었습니다. 수요가 있고 수요자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정부 기능 조정

이 대목에서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역대 선거 때마다 작은 정부, 작은 정부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작은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정부 부처 간의 기능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더 있어야 하고 일이 없는 곳에 사람을 줄여서 반드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기능을 조정해서 더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점이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정부가 과거와 같이 지도하고 처벌하고 하는 그런 역

할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역할은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의 감독 기능을 가지고 철저히 그 기능을 살리고 그 외의 기능은 모두가 다 서비스 기능으로 가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우미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 이전에 정부 기능과 공직자의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은 예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면 지금 현재 방송과 통신이 따로 있으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어느 한쪽으로 모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서 간에 기능과 인원이 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공약해서 지켜지지 못할 공약보다는 저는 그 시대에 맞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하지 말아야 할 역할은 빨리 손을 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일은 앞으로 조정하면서 그것도 기능을 민간에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공약보다는 기능을 조정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짧은 시간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수입을 많이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 기업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정부가 도입하게 되면 정부 예산을 쉽게 1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줄일 수 있다면 20조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재정 수입 없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돈을 대주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양극화 현상에서 현재의 교육 제도로서는 가난한 사람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없어서 결국 가난의 대를 물리게 되므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 2대까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장학제도가 있고 대여금 제도가 있지만 대여금은 사실상 금리를 봐도 너무 높고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장학 제도를 써도 되고 수월성을 위해서 특목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교조가 비판하듯이 돈 없는 사람은 대학갈 수 없지 않느냐, 등록금이 세 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특목고를 만들 때 학생 50%에게 장학금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주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반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등록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 학생들 50% 뽑고 나머지 50%는 지역의 제한 없이 없는 것처럼 하고 또 장학 제도는 서울시가 반을 부담하고 또 등록금을 만드는 쪽에서 반을 부담해서 50% 정도는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제도는 인재 양성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다음 정권이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금융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금융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금산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야 일반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고용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고급 일자리를 만들고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면 대답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대강의 답변을 후보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47핵심 비전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매년 7%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5% 또는 4%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고속 성장은 항상 물가 불안이나 경기 과열을 초래했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 후보님께서는 인재 양성 문제와 교육 정책을 그 답으로 제시하셨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성장 잠재력 제고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성장 잠재력 제고에 대해 어떤 구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 개혁의 비전입니다. 그 동안 정부 재정 규모나 국가 부채가 느는 등 공공부문이 빠르게 비대해졌습니다. 오늘 후보님께서 부처 기능 조정을 통해서 정부 개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일부에서 후보님께서 정부를 기업형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됐는데 이것이 정부 조직을 영리 법인처럼 관리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차제에 공조직 관리와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선 기업 경영을 오래하신 배경 때문에 누구 못지 않게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고 분명한 기업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하고 계신 우리나라 기업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저는 국제 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님께서 세계화를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찾겠다는 말씀과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동력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무척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연관된 첫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여러 해 동안 국가 차원에서 우리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육성하자고 국제화 추진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구상 노력, 로드맵 준비에 비해서는 실제 실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만일 집권하시는 경우, 금융 허브 구상이 바람직한 국가 경제 발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실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통상과 관련된 이슈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 지난 4월에 한미 FTA가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 봄 전까지 양국 의회를 통과해서 비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쇠고기 수입 문제와 같은 이슈로 미국 의회 지도부와의 상당히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해서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FTA의 전반적인 추진 전략에 대한 비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세계 경제 질서는 급속히 종전의 미국 중심구도로부터 중국 러시아 등의 다양한 나라들의 경제력이 부상이 되어 그 축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리라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동북아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북아 외교 정책의 방향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교 안보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후보) 김종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5%가 안 되는 데 7%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있지만 저는 민간 부분에서 해야 할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잠재성장력을 초과하는 과성장은 무리가 있다, 지속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잠재 성장을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잠재 성장력은 저희가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이것은 과학기술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산업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공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 개혁은 제가 아무리 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영리 법인같이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을 서울 시장 재임 중에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경영 행정이라는 민간의 경영 기법과 공익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합쳐서 하는 행정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공기업에서는 민간 기업과 같은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야만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역대 정권에서 나왔지만 사실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을 다시 민간 기업으로 해봐야 대기업이 또 인수를 하게 되고 대기업 집중이 심해지게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민영화를 하지 않고 국가가 경영하면서도 완전히 주식회사 경영하듯이 운영해서 실제로 민간 기업 이상의 효율을 낸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공기업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되고 현재 공기업의 방만한 방법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문제도 개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을 줄인다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원 줄이는 걸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관점에서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업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를 높인다는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명성 경영은 앞으로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근래 사회 풍조와 같이 사회적 기여를 강요하는 그러한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기업 경영에서 스스로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허브와 관련된 문제는 금융 허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정권에서도 일을 좀 했습니다. 법도 개정을 하고 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금융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부가 우리 금융 허브를 김포 매립장에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외국 금융인들이 서울 시장인 저한테 우리가 어디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융허브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여기에 와서 금융 활동 영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활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에 각종 서비스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가 따르고 각종 전체의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존에서 지역적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까지 금융 시장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FTA 문제는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관점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개방되는 것이 아니면 당사국 양자 간 협상하는 FTA를 가지고 우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과의 FTA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 FTA는 산업이라는 관점으로도 보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FTA로 국민들이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고 더 좋은 질의 물건을 더 싸게 접할 수 있다면 산업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FTA는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여러 가지 산업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적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는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산업도 이걸 계기로 경쟁력이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중심이 미국중심에서 동북아, 아시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북아의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는 것이 되면 어쩌면 동북아의 6자 회담 기구가 그 기능을 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하나의 체제로 유지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경제 협력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 저는 북한 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질문 하나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관계가 경직될 걸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채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는지 그 점수를 구체적으로 매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에는 1만5천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가족까지 합치면 아마 6, 7만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경제적 영향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성 공단에서 근로자들이 한 50만명 정도 되고, 남한 기업에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을 합쳐 북한 전체로 봤을 때 200만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 경제의 영향으로 가면 그때는 아마 공동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후보님께 바스켓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책 바스켓이고 하나는 쓰레기통을 드릴테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중에서 어떤 사항은 정책 바스켓에 넣고 어떤 사항은 쓰레기통에 넣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내용을 잘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비유하자면 그런건 식당 주방장들이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차리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비전을 팔아먹는 세일즈맨쉽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성공한 사람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후보께서는 신화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청계천에서도 성공하셨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가 대내외적으로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삼성이나 LG 하면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이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세일즈

맨십의 자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이후보님의 가장 역점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누구를 찍을지 마음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후보께서 하신 청계천 세일은 제가 볼 때 소나타급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보잉 747 정도의 세일즈 규모이기 때문에 2분 정도 저희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 지 토목 공학적이나 경제 기획 차원이 아닌 감성적 차원에서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의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인적 자원 개발 문제 중에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TV에서 뵈니까 5세까지 정부에서 육아를 담당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교 평준화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써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교육부에 문의를 하면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고 대학에 다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고 대학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대학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 복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시장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다들 주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정책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시장이 워낙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또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정부의 지원 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여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정책 패러다임만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속 정책을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 서비스 시장 부분에 대하여 한 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 이상만 중앙대 교수님께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후보는 경직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저는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가 좀 살아나면 그것은 남북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국민을 우리가 진정으로 동족으로서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난민이 생기면 거기다가 구호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세계화 된 세상에 세계인의 한 몫을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족이라는 북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비즈니스의 계산을 떠나서 인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는 북한에 수해가 생겼을 때가 마침 그때 경선이 끝나고 발표할 때였는데, 제가 발표 서두에 가장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국민이 겪고 있는 수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식량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의료품을 보내는 것은 항상 소모적 지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북한 자체를 영원히 지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에 우리가 해야할 지원은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개방하게 되어서 우리가 10년 안에 1인당 소득 3천불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원의 대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북한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서로 북한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양쪽에 윈윈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만명이 고용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셨지만, 그건 200만명이니 100만명이니 그런 특정한 숫자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업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지가 맞아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권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량을

주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단을 어디에 만든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을 한쪽 공단에 다 모아서 투자가 너무 집중적으로 되면 결국은 고용자를 위한 숙소를 짓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맞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장을 사방에 지으면 거기에서 출퇴근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공단을 크게 만들어서 몇십만 명을 고용한다면 전부 숙소를 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 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지 맞는 쪽에 들어가서 청진에 가든 해주에 가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간의 문제는 매우 실용적인 관점으로 보면서도 한편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성 공단 얘기를 했습니다만 1만 5천명 북한 주민들이 일하고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6개 기업이 들어가서 13개 기업이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익이 나야지 적자가 난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북한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북한쪽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진에 기업이 들어가고 싶은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거기에서 인터넷도 할 수 없고 금융도 할 수 없는데 기업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통 큰 투자를 하려면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통 큰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 아마 이쪽 정상도 그건 잘 모를 것입니다. 양쪽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만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걸 쓰고 어느 걸 버릴 것이냐라는 문제는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항상 점수는 결과를 보고 매기는데 이제 말로 시작한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점수라는 건 항상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요즘 정치가 뭡니까? 말만 잘해서 그걸로 점수 매기면 다 100점 받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매길 때가 아니고, 어느 걸 버리느냐 라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잘못되면 또 시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맨십과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브랜드를 세일즈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준이 대단하다, 믿을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 CEO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한 CI를 판단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듯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은 기업의 브랜드를 세일즈 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 점에 있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숙 교수님께서 저출산 고령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 둘 이상 낳을 때는 셋째 아이부터는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10년 후에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억지로 아이는 더 낳았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빠르게 오고 있는데, 저는 60대에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서 60대의 장년들에게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5세라고 해서 연금 주고 뭘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은퇴를 빨리하게 되면 은퇴 때문에 오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문제에 앞서서 60대 노동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모색하면 국가적 이익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제가 0세부터 5세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보육비를 지원해주자, 그러면 부부가 같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도 덜어주고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성도 같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정적 이유가 아니어도 오늘날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서 여성도 같이 일해야만 하는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약 3조원이 듭니다. 0세에 아이를 낳아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5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한다면 3조원 가까운 예산이 듭니다. 하지만 3조원이 들더라도 저는 그만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공약을 했고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 문제는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교육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 경쟁을 강화하는 건 대학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나서 일일이 대학 하나하나에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부가 가끔 세계 100대 대학에 몇 개를 넣겠다 발표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자기가 뭔데 대학을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대학이 노력해서 스스로 해내는 거지 교육부가 몇 개를 세계 100대 대학에 넣겠다고 목표를 발표할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철저히 자율에 맡기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운하 문제는 우선 EU가 3년 전에 2010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백서에서는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로상의 화물차 운행을 줄여야 한다고 하고, 그 대안으로 운하를 이야기합니다. 운하에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에서 EU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은 운하가 없기 때문에 EU가 기술과 재정을 지원해서 운하를 파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UN의 첫 과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이번에 APEC 회의의 첫째 과제는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발효되는 교토 의정서에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이 철저히 물을 더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히도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의 강이 여름 한철에 비가 오면 그냥 30시간 안에 다 증발되거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홍수 때는 물이 넘쳐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하상을 정리 하지 않아서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불과 5, 60년 전에는 부산에서 배가 안동까지 들어갔습니다. 목포에서 광주까지 배가 들어갔는데 중간에 나주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배가 다니다 등대를 보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주요 강에 배가 다니지 않는 강이 별로 없습니다. 더러워진 물을 또 정부 예산을 들여서 물을 맑게 하는 데 건교부와 환경부가 쓰는 예산이 20조입니다. 10년 예산이 20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하를 만들게 되면 갈수기에도 물이 보관되어서 한강과 낙동강에 현재 7억 톤이 보관되어 있는 물이 17억 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이 맑아집니다. 갈수기든 홍수기든 똑같은 물을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50대의 대형 트럭을 한 대의 배로 대신할 수 있어서 도로상에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의 우리가 환경 문제를 놓고 볼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내륙이 발전하고 관광이 발전하고 부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로 탄소 배출량을 2013년부터 제한하면 우리가 공장 하나를 더 짓는 것도 어렵게 되버리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더 보관하게 만들던지 북한에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후진국에 나무를 심으면 탄소 배출량의 쿼터를 더 받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나무를 많이 심어주면 남북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북한에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쿼터를 더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21세기에 맞는 고도의 전략을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운하가 환경 파괴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엇그제 네덜란드에서도 왔습니다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운하의 길이가 7500 킬로미터입니다.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국토는 작지만 5400 킬로미터

의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19세기에는 물류만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21세기에는 환경이 더 중요시되는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유럽은 운하건설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물론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천에서 충주까지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낙동강까지 연결하는 것은 미처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걸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공병단에 의뢰해보니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작하려다가 재정이 없어서 뒤로 미루다가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정부가 그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놀라운 발상을 우리 정부가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토 의정서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차원 높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창 법무법인광장 고문)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문제입니다. 국제 경쟁력 평가 기관에서 보면 늘 우리 노사 문제가 평가 대상국가들 중에서 꼴찌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 꼴찌를 했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임금 수준은 높고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싱가폴이나 홍콩 대만 등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성 노조로 노사문제가 늘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칙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7% 성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런 노사 환경에서 7%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10년 내에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노사 문제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운영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금산 분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산업 자본 참여를 거의 배제하다시피 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에 의결권을 4%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미국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금산 분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사금고화 한다든가 독점을 더 강화시킨다든가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킨다든가 불공정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기업 경영 투명성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희숙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 후보께서는 기업을 경영해 오신 분으로서 내공이 기대는 되지만 대기업에 계신 분이 과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의문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산업의 7, 80%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 자금 문제, 규제, 정책, 대기업과의 상생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혁신 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 같은데 후보께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만 세계 최저가 아니라 기업 창업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불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업 환경을 평가하는 항목 중 창업 환경이 최저를 맴돌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런 창업의 기피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후보) 김종창 고문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7% 성장하는 건 그냥 7% 성장할 수 있는게 아니고, 7% 성장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노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일관되게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할 것은 기초 질서를 우선 확립하겠다, 그리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업도 경제도 이 토대 위에서 되는 것이고 진정한 선진국도 이 토대 위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조그만 중소기업이 정말 여건이 나빠서 노사 분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이번 같이 비정규직 법을 바꿨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노사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이 법을 이번에 바꾸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오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강성 노조, 정치적 노조 활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법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은 더더욱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성장에는 상당한 비중으로 이 노사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사의 문화는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협력이 잘되면 생산성도 굉장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잘 합의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70년 80년대 미국 다닐 때 저는 GM만큼 대단한 기업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스미스 회장이었는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사가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서 일자리는 3만개가 줄고 GM은 도요다에게 2등으로 밀려나 버리는 걸 보면 도요다와 같이 노사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성장하려면 이 노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금산 분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에 금융까지 합쳐지는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왔다갔다하고 제가 14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다루었으니까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다는 논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만 달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은 그냥 스스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길만 터주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은, 그리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잘 마당을 닦아주기만 해 주면 정부가 할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대기업이 조금 더 협력적으로 나가게 되면 중소기업도 도움이 되지만 대기업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재산업이라든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 소재 산업이나 원천기술 개발 문제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 과학에 관련된 미래 유망한 산업도 초기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창업을 기피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이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창업 비율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과거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시대는 자본도 기술도 경영 경험도 없이 정말 벤처같은 기질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고 전력을 쏟으면서 그 산업을 일으켰고 그 산업이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려면 오늘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하는데 이 도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금융화와 관련이 되는거고, 투자를 전문하는 금융회사들도 그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이 있어야 창업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만일 그런 입장이라면 창업하겠는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이런 점에서 앞으로 맞춤형 정책이라는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도 상품에 맞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듯이 정책도 똑같은 중소기업 정책을 가지고는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정책도 아주 맞춤형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창업과 중소기업에 관련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대기업은 잘할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참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균형 발전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수도권 이전 문제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가실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명박 후보)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 건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운하를 만들 때도 내륙을 발전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4만불 소득을 만들려면 수도권의 성장만으로는 힘들고, 부산·경남 중심의 경제권, 호남의 경제권, 충청의 경제권 등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고 이 광역 경제권이 수도권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정부가 지원해서 독자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도 소극적 방법이지만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데,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가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그대로 시·도지사에게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공기업이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지방 어디에 기업을 설치할 건가는 시·도지사에게 맡기면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굳이 지정한 장소에 만들려고 함으로써 현재 1억만 평이 넘는 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정권에 들어

와서 토지 보상비로 나간게 1/4분기 현시점만 해도 74조 원이 되고 약속해서 내년까지 주기로 결정한 것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지역이 광역 경제권으로 독자적 경제를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규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가게 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은 역대 정권이 늘 내세웠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나라가 기업하는 사람이 존중을 못 받고, 사회가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 문제도 문제지만 그 소수 때문에 전체의 기업이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반시장적인 정서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두 사람 이상만 고용하는 구멍가게에서부터도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도 스스로 투명하게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도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가를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기초질서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기업하는 사람이 받는 어려움에 대하여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존중받고 기가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HRI

정리 및 교열

강대창 연구위원(dkang@hri.co.kr) ☎ 02-3669-4457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HRI 經濟 指標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2	5.0	4.5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9	4.5	4.4
	민간소비 (%)		4.9	7.9	-1.2	-0.3	3.6	4.2	4.3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4	3.2	4.6
	건설투자 (%)		6.0	5.3	7.9	1.1	-0.2	-0.4	2.5
	설비투자 (%)		-9.0	7.5	-1.2	3.8	5.7	7.6	7.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61	-3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61	11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70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4)	(13.8)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59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8.4)	(16.1)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8	2.2	2.5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5
금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8	5.0